



미국 : 작업장 내 흑인 인권 지지 탄압 논란

2020년 5월 경찰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이 숨졌던 일명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 사건’은 인종차별 및 흑인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팬데믹 정국 속에서도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작업장 안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흑인 인권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규정과 이미지 관리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20일 깃와이어(Geekwire) 기사에 따르면¹⁾, 홀푸드(Whole Foods), 스타벅스, 타코벨 등의 기업

이 흑인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Black Lives Matter’라는 슬로건이 적힌 마스크를 점원들이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업체들은 복장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회사와 무관한 슬로건을 드러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논란이 일자 스타벅스는 방침을 변경하였지만 타코벨의 경우 해당 점원을 해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었다. 특히 홀푸드 시애틀 지점의 해당 직원들은 업체의 지침에 반대하여 매장 밖에서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또 필라델피아 매장에서는 경찰관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정책에 반대했던 직원이 해고당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 Geekwire(2020.6.20), “Whole Foods workers protest after grocer prohibits employee-worn Black Lives Matter masks,” Retrieved on Jun 22th, 2020. <https://www.geekwire.com/2020/whole-foods-workers-protest-grocer-prohibits-employee-worn-black-lives-matter-masks>

미국 : 경제활동 재개 이후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팬데믹 국면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재개 이후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¹⁾ 여러 기업인들과 보수 진영 활동가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 직원 및 소비자들의 코로나 감염 책임을 기업에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화당과 트럼

프 행정부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Liability protection)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팬데믹 국면에서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기업의 경제활동이 저해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그에 대해, 민주당 및 노동조합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행법하에서도 기업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소송 건수가 미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더 나아가, 반대 진영에서는 팬데믹 국면에서 경제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The New York Times(2020.6.12), "Businesses want virus legal protection. Workers are worried," Retrieved on Jun 22th, 2020. <https://www.nytimes.com/2020/06/12/business/economy/coronavirus-liability-shield.html?searchResultPosition=7>

미국 : 국세청(IRS),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잘못 지급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원조·구호·경제안정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이 통과·시행되면서, 세금 목적을 위한 미국 거주자(US residents for tax purposes)¹⁾들은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생활지원비(stimulus check)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간 개인 소득이 75,000달러(한화 약 9,100만원) 미만인 1인 가정은 1,200달러(한화 약 130만원)를 지급받게 된다. 이때 현재 미국에서 노동하고 있거나 최근 2년간 노동한 적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nonresident aliens) 중 일부 또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생활지원비를 잘못 받게 된 이유에는 세금 신고상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비자인 F-1이나 J-1 비자로 미국에 와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미국에서 임금을 받고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터보

텍스(TurboTax) 등의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맞추어 설계된 것이 아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금 목적을 위한 것으로 미국 거주자들의 세금 신고서 양식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은 잘못된 환급액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세금 목적을 위한 미국 거주자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 신고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잘못된 방식으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국 국세청에 연락을 취하여 이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국세청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위 문제와 관련한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²⁾

- 1) 세금 목적을 위한 미국 거주자(US residents for tax purposes)에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substantial presence)한 외국인들까지 포함된다.
- 2) Politico(2020.5.1), "IRS mistakenly sends stimulus checks to foreign workers," Retrieved on June 5th, 2020. <https://www.politico.com/news/2020/05/01/irs-mistakenly-sends-stimulus-checks-to-foreign-workers-228974>

미국 : 인공지능과 자동화, 노동자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줘

2019년 11월, 미국의 저명 경제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높은 교육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아 미국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¹⁾ 이 보고서의 주장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딥러닝 등의 방식을 통하여 인간의 추론(inference), 예측(prediction) 및 전반적인 문제 해결(problem-solving) 능력을 유사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보다 크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은 마케팅 분석 전문가나 개인 금융 상담사(personal financial consultant) 등의 직종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및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생계상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견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

는 것이다. 자동화는 '작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자동화는 인간이 실제로 몸을 움직여 해결하여야 했던 작업들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는 문제 해결 자체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순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에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intelligence)을 닮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직업들에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인간의 노동에 위협으로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특허 신청서들을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한 결과, 해당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법,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 및 직업을 탄생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1) The Brookings Institute(2019), "What Jobs Are Affected by AI?: Better-paid, better-educated workers face the most exposure," Retrieved on June 5th, 2020.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9/11/2019.11.20_BrookingsMetro_What-jobs-are-affected-by-AI_Report_Muro-Whiton-Maxim.pdf



스웨덴 : 재무부 장관,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경제전망 발표

2020년 6월 11일 재무부 장관 막달레나 안데르손(Magdalena Andersson)은 코로나19로 인한 잠재적 경제 영향을 대비한 추가적인 정책개입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¹⁾

기자회견에서는 스웨덴이 현재와 같은 느슨한 대응이 아닌 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택했다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장관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며 현재 재무부에서는 일자리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장관은 스웨덴의 소비지표 하락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았던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비교가 가능한 경제 관련 통계자료가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웨덴을 이웃 국가와 단순 비교하고 피해 정도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전반적인 대응 및 전략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세계 언론에서 스웨덴 방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과장하여 묘사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막달레나 안데르손 장관은 2020년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을 -6%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예측한 경제성장률인 약 -7%보다 조금 개선된 수치다. 한편 장관은 2020년 1분기에는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이 0.1%가량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 수치는 하반기에 조금 회복될 것이라 예측했다.²⁾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정확한 경제전망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경기회복과 관련한 몇몇 긍정적인 신호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스웨덴의 국내총생산이 2022년까지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스웨덴은 강한 폐쇄조치를 취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느슨한 조치를 취해 많은 상점과 사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운영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내수 경기 침체를 최소화했지만 수출 의존 경향이 큰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1) The Local(2020.6.11), "Economy not a consideration in Sweden's coronavirus measures: Finance Minister," <https://www.thelocal.se/20200611/economic-impact-not-a-consideration-in-swedens-coronavirus-measures-finance-minister>

2) The Local(2020.6.18), "Sweden reports first signs of economic recovery after coronavirus crash," <https://www.thelocal.se/20200618/sweden-reports-first-positive-signs-of-economic-recovery-after-corona-crash>

스웨덴: 노르웨이 접경지역의 마을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르웨이에 접경한 스웨덴의 작은 마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¹⁾ 특히 노르웨이 국경과 인접한 스웨덴의 샬로텐베리(Charlottenberg)와 같은 작은 마을의 소매업 종사자들은 큰 피해를 보았다. 그동안 국경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노르웨이인들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스웨덴으로 식료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국경폐쇄를 택한 노르웨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 이들은 더 이상 스웨덴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마을의 한 소매업자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국경폐쇄로 인해 90%가량의 매출 손실을 경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편 스웨덴-노르웨이 접경 지역에 위치한 스웨덴 내 최대규모 쇼핑몰인 노르비 센터(Norby centre)의 매출도 95%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쇼핑몰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가까운 거리

에 위치하여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찾던 곳이다.

6월 중순 노르웨이 정부는 국경폐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다른 북유럽 국가와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가하였다. 하지만 스웨덴에 한해서는 스웨덴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이유로 스웨덴-노르웨이 간 국경폐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웨덴-노르웨이 국경에서 노르웨이 쪽에 위치한 소매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소매업자들의 매출이 70%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정부의 국경폐쇄조치 유지결정에 대해 접경 지역 중 스웨덴 쪽에 위치한 지역 정치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지역은 다른 스웨덴 도시에 비해 낮은 확진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비롯한 몇몇 지역의 국경폐쇄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 The Local(2020.6.20), "Swedish border towns hit hard by no lockdown policy," <https://www.thelocal.se/20200620/swedish-border-towns-hit-hard-by-no-lockdown-policy>



영국: 싱크탱크, 코로나19에 대응한 봉쇄정책으로 영국 내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

영국의 싱크탱크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기간 동안 저소득 가구는 부채를 늘려 왔지만, 고소득 가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 왔다고 분석했다.¹⁾

이와 같은 자산 격차 확대의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봉쇄정책 등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은 가구들이 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봉쇄기간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4,700파운드(한화 약 700만원)의 저축을 보유한 반면, 동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저축액은 1,900파운드(한화 약 290만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 가구는 봉쇄기간 중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 소비자 신용(consumer credit)을 늘려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소비자 신용을 늘린 비율은 13%에 불과했고, 외식 등 생활 지출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저축을 늘린 비율은 34%에 달했다.

보고서의 저자 조지 뱅햄(George Bangham)은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저소득 가구에 미친 영향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정부가 통합수당(Universal credit)을 통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중저소득 가구가 저축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Independent(2020.6.21), "Lockdown increasing UK's wealth divide, think tank report warns,"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coronavirus-lockdown-wealth-divide-uk-savings-debt-poverty-a9578541.html>

영국: 인종차별로 인해 소수인종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았다는 결론을 담은 미공개 보고서 유출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의 코로나19 관련 보고서 중 정부에 의해 발간이 거부된 부분을 스카이 뉴스(Sky News)가 입수하여 보도하였다.¹⁾²⁾ 2020년 6월 2일 발간된 영국 공중보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흑인, 아시안 및 여타 소수인종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번에 유출된 미공개 부분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인종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소수인종들이 각종 차별을 경험하면서 국민의료보험(NHS)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치료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그들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미공개 부분의 저자인 영국 공중보건국의 케빈 펜톤(Kevin Fenton) 교수는 약 4,000여 명의 소수

인종 및 교수 등으로부터 받은 증언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수인종 지역사회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1차 확산으로부터의 교훈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그들이 또 다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나단 애쉬워드(Jonathan Ashworth) 예비내각 보건장관(shadow health secretary)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수인종 지역사회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최대한 빨리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여 오해를 막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 Sky news(2020.6.14), "Racism has contributed to COVID-19's disproportionate impact on UK BAME community, leaked report shows," <https://news.sky.com/story/coronavirus-racism-has-contributed-to-covid-19s-disproportionate-impact-on-bame-community-leaked-report-shows-12005950?dcmp=snt-sf-twitter>
- 2) The Guardian(2020.6.14), "Racism contributed to disproportionate UK BAME coronavirus deaths, inquiry find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n/14/racism-disproportionate-uk-bame-coronavirus-deaths-report>

프랑스 : 봉쇄정책으로 취약계층 더욱 어려움에 처해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난 8주간의 봉쇄정책이 생활 수준, 성별 또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른 수준의 어려움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¹⁾ 봉쇄 마지막 주에 이루어진 1,600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리기간 동안의 감정 상태를 알아본 이 연구에 따르면,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은 0점(고통스럽지 않음)~10점(매우 고통스러움)까지 고르게 분포했고 평균은 4.7점을 기록했다. 이 연구의 공동저자인 스테판 레글레예(Stéphane Legleye)는 예상했던 평균치인 6, 7점보다 다소 긍정적인 결과라고 말했지만 서면이 아닌 전화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 평

균치 뒤에 많은 불평등적인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10점(매우 고통스러움) 중 7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고통스러웠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빈곤층에 속하는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에서 37%로, 부유층에 해당하는 소득5분위(소득 상위 20%)의 17%보다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의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부분실업률이 높았으며(소득1분위: 30%, 소득5분위: 21%)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식했다(소득1분위층: 30%, 소득5분위층: 11%). 이 조사는 또한 남녀 간 불평등을 환기시켰다. 여성이 보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83%의 여성이 하루 4시간 이상 보육, 남성의 경우는 57%) 육아휴직을 더 많이 신청했다(여성: 21%, 남성: 12%). 육아



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자녀 여성 노동자가 유자녀 남성 노동자에 비해 더 '고통스러웠다'(여성 5.1점, 남성 4.3점)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상태(은퇴자의 30%, 노동자의 25%, 실업자의 24%가

'고통스러웠다'고 답변)와 가구 규모와 구성(1인가구의 30%, 다인가구의 30%, 한부모가구의 29%가 '고통스러웠다'고 답변)에 따라서도 봉쇄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1) Les Echos(2020.5.25), "Le confinement jugé plus pénible par les femmes, les personnes modestes et les retraités," <https://www.lesechos.fr/politique-societe/societe/le-confinement-juge-plus-penible-par-les-femmes-les-personnes-modestes-et-les-retraites-1216922>

프랑스 : 가속화되는 경제회복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2분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봉쇄령의 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는 부분적으로 억제되고 있다. 통계청은 3주 전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수정했다.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경제활동의 손실은 4월에는 29%, 5월에는 22%, 6월에는 12%로 점점 나아지는 추세지만 "이 추정치는 특히 6월에 발생할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 쌓여 있다"고 INSEE의 줄리앙 푸제(Julien Pouget)는 경고한다. 보건 위기의 정도, 고용 또는 국제 정세의 변화는 여전

히 불확실하기에 향후 몇 개월 지속적으로 GDP 성장률 추정치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경제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고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2019년 말의 GDP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노동부 산하 통계국(La Dares)에서도 성장 회복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발표했는데, 영업을 중단되었거나 절반 이상 감소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비율이 5월 27%로 3월(49%)과 4월(45%)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1) Les Echos(2020.6.17), "L'accélération de la reprise économique se confirme en France,"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lacceleration-de-la-reprise-economique-se-confirme-en-france-1215955>

일본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

일본의 2대 경영자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와 경제동우회는 재택근무와 관련해 각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경단련의 조사¹⁾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설문조사에 회답한 총 406개 사 중 약 97.8%인 397개 사였다. 이 중 금융, 전력, 의료 등의 업종을 제외한 227개 사로 범위를 좁혀 보면, 재택근무자의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36.1%(82개 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 미만'이 27.3%, '50~70%'가 20.3%, '70~80%'가 16.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의 총 종업원 수(약 115만 명)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66%가량(약 76만 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한편 경제동우회의 조사²⁾에서는 조사 대상 중 49.5%가 재택근무자의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70~80%', '50%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각각 17.5%였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8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33.3%에 그친 반면 비제조업에서는 54.4%로 나타나 비제조업 분야의 재택근무자 비율이 높았다. 또 재택근무를 도입·확대하는 데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꼽은 것은 '종업원의 근무 특성'(74.8%, 302개 사)이었으며, 다음으로 'IT 등의 설비 부족'(18.3%, 74개 사)이 뒤를 이었다. 현재 상황에서 출근자 절감을 위해 실시한 대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재택근무 추진'이라고 답한 기업이 95.2%에 달해, 조사 대상 기업 중 대다수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로테이션 근무'가 50.5%, '사업소의 휴업 및 조업 정지'가 24.8%, '기타'가 9.5%, '사전에 예정된 휴업의 조기 실시'가 3.8%였다.³⁾

- 1) 경단련은 2020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1470개 사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406개 사(약 27.6%)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 2) 경제동우회는 2020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동우회 소속기업 250개 사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105개 사(제조업 25개 사, 비제조업 80개 사)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 3) ビジネス・レーバートレンド6月号(2020.5.25),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でテレワーク・在宅勤務、出勤抑制進む」.



일본 : 재택근무자 절반 이상이 통상근무보다 장시간 노동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4월 이후 재택근무를 시작한 회사원과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5~9일 재택근무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의 51.5%(남성 58.4%, 여성 44.6%)가 통상근무를 할 때의 노동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8.1%는 잔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시간 외 노동이나 휴일 노동을 하였는데, 이를 근무처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65.1%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기 어려움', '시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잔업을 했다고 신고를 해도 근무처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도 56.4%나 되었다.

노동자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해, 회사가 근무시간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1.5%였으며, 종업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근무시간 관리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재택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장점의 경우 '통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다'(74.6%), 단점의 경우 '근무시간과 그 외의 시간을 구분하기 어렵다'(44.9%)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¹⁾

1) 毎日新聞(2020.6.19), 「テレワーク 半数超が通常勤務より長時間労働 公私の区別も難しく 連合調査」, <https://mainichi.jp/articles/20200619/k00/00m/040/033000c>

중국 : 실업보험 보장 범위 확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자 2020년 5월 29일 실업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관련한 통지를 발표했다.¹⁾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적시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지급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가 중단되었으며, 이미 실업 등록을 하고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에게는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

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 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상황에 따라 장례보조금 및 위로금도 규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또 2019년 12월부터 고령의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었다. 둘째, 실업보조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0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실업 상태인 실업자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실업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실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현지 실업급여의 80%를 넘지 않고 실업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는 실업급여와 기본 의료보험료 대납, 장례보조금 및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취업 후 사회보험에 가입했거나 해외 이주, 군 입대, 도시 노동자 기본 양로보험 혹은 도 농 주민 양로보험의 혜택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실업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실업 농민공에 대한 보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업보험조례」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연속으로 일한 농민공에게는 그동안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1회성 생활 보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한다. 실업보험 가입이 1년 미만인 실업 농민공에게는 2020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보험 가입 지역의 최저 보장 기준에 따라 최장 3개월간 매달 임시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넷째, 물가상승에 따른 임시 추가 보조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실업급여 혹은 실업보조금을 수령하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임시 추가 보조금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한다. 다섯째, 실업급여 신청과 수령 과정을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업무를 개선하고 제출해야 할 각종 증명 서류들을 줄여서 실업자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1) 中華人民共和國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2020.5.29), 「人力資源社會保障部 財政部 關於擴大失業保險保障範圍的通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shehuibaozhang/zcwj/202006/t20200609_375841.html

중국 : 노동 과목을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도입

중국 교육부는 최근 일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노동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¹⁾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노동 과목은 모두 6학점인데 그중 봉사활동이 2학점으로, 학생은 고등학교 3년 과정 동안 최소 40시간의 봉사활동을 수업 외 시간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2020년 3월 국무원은 「새로운 시대 초중고 교과 과정 중 노동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에 관한 의견(아래 의견)」을 발표해 노동교육을 초중고 및 직업학교, 대학

교 교과 과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²⁾

이 ‘의견’의 작성에 참여한 산둥(山東)사범대학 교육학부 류시량(柳夕浪) 교수는 노동교육을 노동의 전인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동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노동과 노동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계가 노동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노동에 참여하게 하면서 직접 노동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의지를 연마하며 올



바른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과정에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지만 육체노동을 주로 강조하면서 육체와 정신을 모두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교육의 핵심 정신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근면, 분투, 창조,

헌신과 같은 노동 정신을 장려하고, 초중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모두 노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을 가꾸 나가며, 불로소득과 투기적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에 분명히 반대하는 가치관을 형성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³⁾

- 1)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20.6.4), 「教育部公布普通高中課程方案 勞動為必修科佔6學分」, http://www.moe.gov.cn/jyb_xwfb/xw_zt/moe_357/jyzt_2020n/2020_zt03/zydt/zydt_dfdt/202006/t20200604_462559.html
- 2) 澎湃(2020.6.5), 「教育部發布新版普高課程方案: 勞動課列為高中必修課」,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7707027
- 3) 網易新聞(2020.5.29), 「新時代勞動教育如何推進? 我們教育部的專家請來了」, <https://3g.163.com/news/article/FDR4KE1V0514P11S.html?from=history-back-list>

브라질: 고용위기 극복 위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감소 방안을 가장 많이 활용

브라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감소 방안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36개국에서 활동 중인 인력 컨설팅업체 페이지그룹(PageGroup)이 2020년 4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52.7%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비용 및 예산 절감을 시행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에 정부의 재정지원(26.2%), 임금 감소(7.1%), 노동시간 단축(4.2%), 임금성 부가급여 감소 및 무급휴가(3.8%), 시간제근로(2.1%) 등의 방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멕시코에 위치한 기업의 임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칠레는 비용 및 예산 절감(55.6%), 아르헨티나는 정부 재정지원 활용(36.7%), 멕시코에서는 무급휴가 사용(3.8%)이 높게 나타났으며, 브라질은 비용 절감(43.1%)과 함께 임금 감소(11.8%), 노동시간 단축(7.8%), 시간제근로 활용(5.9%)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게 나타났다.¹⁾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방안(표 1 참조)의 일환으로 최대 90일 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60일 동안 일시적 고용계약 중단을 허용하는 임시법령이 시행되었다. 2020년 4~6월 사이 MP 936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노동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민간부문 공식 고용(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0%에 이른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노

<표 1> 고용유지 프로그램(MP 936) 개정 법안

분류	주요 내용
적용 기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한 행정부는 최대 60일 동안 고용계약 정지 또는 최대 90일 동안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방안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공식 고용(정규직) 노동자, 가사노동자 및 파트타임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적용 예외	실업보험 혜택을 받거나 사회부조(Benefício de Prestação Continuada: BPC)를 받는 공무원
추가 수혜	3개월 동안 600헤알(한화 약 14만 원) 긴급 지원 적용 확대: 간헐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실업보험 비수혜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노동자, 2020년 3월 또는 4월에 실업보험을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
임산부	고용유지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임신한 여성 해고 금지 및 출산 시 임금삭감 없이 실급여 지급
장애인	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급여 인하율에 비례하여 급여에서 공제되는 대출금, 할부금 등의 납부율 감소

동자에게 실업보험 지급액 범위인 약 1,050~1,800 헤알(한화 약 23만 8,000원~41만 3,000원) 안에서 급여를 보전해주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이 평소 받았던 급여보다 약 1,000헤알(한화 약 22만 8,000원)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법령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구제

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위기를 빌미로 임금 삭감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상원은 2020년 6월 16일 코로나 19 장기화를 이유로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고용유지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³⁾

- 1) G1(2020.6.11), “Brasil lidera redução salarial e de jornada de trabalho na América Latina durante a pandemia, revela estudo,”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6/11/brasil-lidera-reducao-salarial-e-de-jornada-de-trabalho-na-america-latina-durante-a-pandemia-revela-estudo.ghtml>
- 2) CARTACAPITAL(2020.6.9), “Brasil tem 10 milhões de afetados por cortes de salário ou suspensão de contrato,” <https://www.cartacapital.com.br/economia/brasil-tem-10-milhoes-de-afetados-por-cortes-de-salario-ou-suspensao-de-contrato/>
- 3) Agência Senado(2020.6.16), “Programa para manter empregos durante pandemia segue para sanção”, www12.senado.leg.br/noticias/materias/2020/06/16/programa-para-manter-empregos-durante-pandemia-segue-para-sancao



브라질 : 긴급 기본소득 도입 논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비공식 노동자의 생계 보전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긴급지원(auxílio emergencial)을 긴급 기본소득(Renda Básica Emergencial)¹⁾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브라질 정부가 약 5,000만 명의 빈곤층에게 지급한 월 600헤알(한화 약 14만 원)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2020년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이다. 긴급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163개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는 ‘우리가 원하는 기본소득(Renda básica que queremos)’이라는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청원을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긴급 기본소득에 대해 이들이 요구하는 주요 방안은 한시적 긴급지원 대책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취약계층과 비공식 노동자 외에 소득 수준이 낮은 공식 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²⁾ 한편 공동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브라질 노총 CUT의 세르지오 노브레(Sérgio Nobre)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 불평등을 줄이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 모두에게 최소 기본소득(Renda

Mínima Permanente)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노동계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회에서도 6월에 종료되는 긴급지원의 후속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더이상 정부 재정으로 600헤알의 긴급지원 지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원 시기를 2개월 연장하되 지원금을 기존 월 600헤알에서 월 300헤알로 감소하겠다고 밝혔다.⁴⁾ 호드리구 마이아(Rodrigo Maia) 하원 의장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재정 역량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0세에서 6세 사이의 자녀를 둔 빈곤층 가구를 위한 최소 소득(renda mínima) 방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⁵⁾ 브라질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부재 및 정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최소)소득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회, 노동계 및 시민사회 진영 등 각각의 입장 차가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6월 말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핵심 쟁점은 긴급지원 대책의 연장 시기, 지원금, 지원대상의 확대 등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1) 브라질은 2003년 톨라 정부 때 기본소득법(renda básica de cidadania, LEI No 10.835)이 제정되었으나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법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과 브라질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인 기본소득 수급 자격을 가지며, 국가의 발전 정도와 예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소득은 식품, 교육 및 건강에 필요한 각 개인의 최소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http://www.normaslegais.com.br/legislacao/trabalhista/lei10835.htm>

2) <https://www.rendabasica.org.br/>

3) CUT(2020.6.10), “Trabalhadores elaboram projeto para criação de renda mínima permanente,”

<https://www.cut.org.br/noticias/trabalhadores-elaboram-projeto-para-criacao-de-renda-minima-permanente-d3c2>

- 4) G1(2020.6.9), “GUEDES CONFIRMA PRORROGAÇÃO POR DOIS MESES DO AUXÍLIO EMERGENCIAL,” <https://G1.GLOBO.COM/POLITICA/NOTICIA/2020/06/09/GOVERNO-CONFIRMA-PRORROGACAO-DO-AUXILIO-EMERGENCIAL-POR-DOIS-MESES.GHTML>
- 5) Veja(2020.6.19), “Com a Covid-19, começa a ganhar forma a ideia de uma renda mínima,” https://veja.abril.com.br/economia/com-a-covid-19-comeca-a-ganhar-forma-a-ideia-de-uma-renda-minima/?utm_source=news&utm_medium=email&utm_content=2262020&utm_campaign=%_AdditionalEmailAttribute1%